

종교인 과세 · 부자 세습 · 불교 정풍운동 등 ‘다사다난’

2017년 종교계 10대 뉴스

한국 종교계는 올해 어느 해보다 다사다난했다. 내년 1월 종교인 과세를 앞두고 개신교와 정부간 밀고 당기기가 치열하게 전개됐으며, 신도수 하락에 부심해온 한국 불교를 이끌 조계종 총무원장에 설정 스님이 취임해 쇠락하는 불교 재건의 무거운 책무를 받아들였다. 개신교는 일부 대형교회의 부자세습논란으로 손가락질을 받았고, 불교계는 촛불 법회가 열리는 등 적폐청산 바람이 거세다. 뉴시스는 종교인 과세논란에서 설정 총무원장 부임에 이르기까지, 올해 종교계를 수놓은 10대 뉴스를 선정했다.



서울 종로구 조계사 일주문 앞에서 열린 '성탄트리 점등식'에서 조계종 총무원장인 설정 스님과 김희중(왼쪽) 한국 천주교주교회의 의장이 박수를 치고 있다.

민사회 단체는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개신교를 제외한 여러 교회는 비교적 큰 저항없이 종교인 과세 방침을 받아들였다.

2. 설정 스님, 갑질 먼 한국조계종 제 35대 총무원장 부임

“불교를 불교답게 만들기 위해 수행 가풍과 승풍을 진작하고 교구 중심제를 강화하겠다.” 제35대 대한불교조계종을 이끌 임기 4년의 총무원장에 부임한 설정(75) 스님이 지난달 1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 대웅전 앞 법회에서 내놓은 취임사의 한 대목이다. 이 발언에는 불교계의 고민이 고스란히 녹아 있다. 인위에서 거세지는 개혁의 요구와 줄어드는 신도수가 그것이다. 설정 스님은 1942년생으로 충남 예산 출신이다. 1985년 수덕사 주지를 지냈고, 1994년 종단 개혁 당시 개혁의 회법체 위원장을 맡았다. 2009년 수덕사 방장에 이어 올해 4월 조계종 원로의원으로 선출된 바 있다. 설정 스님은 총무원장 선거 과정에서 양분된 교계를 수습하고, 신도가 빠른 속도로 줄어드는 불교계 생존의 기반을 닦아야 하는 무거운 과제를 받아들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교황청특사단 간담회 개최를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특사인 김희중(왼쪽) 김희중 대주교와 악수하고 있다.

1. 50년 만에 첫걸음 떼는 종교인 과세, 내년 시행

지난 50년간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던 종교인 과세가 내년 1월부터 실시된다. 이낙신 초대 국세청장이 이 문제를 처음으로 언급하고 난 뒤 과세에 이르기까지 무려 50년의 세월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 이들은 거의 없었을 것이다. 종교인 과세에 가장 강력하게 저항한 교단은 이번에도 개신교쪽이다. 정부와 협거투기를 하며 2년 유예 조치를 주장했다. 소득세 과세 항목을 놓고 당국과 시카자가 컸으나, 결국 종교 활동비는 비과세를 유지하는 쪽으로 교풍정리됐다. 시

3. 종교개혁 500주년 맞은 개신교, 일부교회 부자세습 역주행

올해도 개신교계는 비바람 날이 없었다. 마르틴 루터가 독일의 비텐베르크 성당에 96개조 반박문을 붙이며 종교개혁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지 500주년을 맞는 해였지만, 추문은 꼬리를 물었다. 성추문 등 목회자들의 일탈이 끊이지 않던 교계에 또 다른 불명예의 주홍글씨를 남긴 곳은 명성교회다. 명성교회는 올해 3월 공동의회를 열고 김삼환 목사의 아들인 김하나 세노래 명성교회 목사를 2대 담임목사로

청하기로 했고, 지난 10월24일 신도들의 거센 항의에도 불구하고 노회에서 부자세습을 사실상 확정지었다.

4. 불교계도 적폐 청산 바람, 촛불법회 명진 스님 단식

박근혜 전 대통령의 낙마를 부른 촛불의 불결은 올해 불교계도 뒤흔들었다. 제35대 총무원장 선거를 앞두고 불교계에서는 교단의 적폐 청산을 요구하는 촛불법회가 꼬리를 물었다. 종단개혁연석회의 등은 지난 3월 제 1차 촛불집회 이후 열 차례에 걸쳐 매주 목요일 촛불 집회를 열었다. 이들이 내건 핵심 요구사항은 총무원장 직선제 실시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법회에서 조계종을 비판한 뒤 제적을 당한 명진스님이 조계종의 적폐 청산을 요구하며 단식을 선언했고 효립스님 등이 단식에 합류하고 재가 불자들이 지지를 표명하는 등 적폐청산 바람은 교단을 넘어 시민사회 전반으로 확산됐다.

5. 김희중 천주교 주교회의 의장, 문 대통령 교황청 특사로 파견

종교계는 북한 김정정은 정권의 핵·미사일 폭주로 고조된 한반도의 위기 해소에 적극 뛰어들었다. 위기해소의 총대를 맨 주인공은 김희중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이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의 특사 자격으로 지난 5월20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로마에 있는 교황청을 방문했다. 닷새간 방문기간 중 교황청측에 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한국-비티칸간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천주교 사제의 바티칸 방문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국과 교황청간 협력의 기틀을 강화하기 위한 시도로 풀이됐다.

6.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한반도 평화통일 세계대회 개최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는 종교계의 구국 운동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이 이끌었다. 통일교측은 북핵 위기로 고조된 한반도의 평화를 기원하고, 평화 통일을 염원하는 2017 한반도 평화통일 세계대회를 지난달 1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에서 개최했다. 이 행사에는 제임스 울시 미국 중앙정보국(CIA) 전 국장, 미국 메릴랜드 주북음대성당의 돈 마이어스 주교를 비롯한 전세계 70여개국에서 온 저명인사 2000여명을 비롯해 8만여명이 참석해 인류 평화와 한반도 평화통일을 기원했다. 또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한 실천 강령도 채택했다. 한화자 총재는 이 자리에서 “인류는) 하나가 될 수 없는 미로에 서있다”면서 “세계를 리드하는 종교들도 마찬가지로”라며 길을 잃은 종교계의 분발을 촉구했다.

7. 한국교회연합, 국가와 민족, 평화를 위한 구국기도회

제임스 울시 CIA 전 국장이 북미갈등으로 고조된 한반도 위기에 우려를 표시한 다음날인 지난달 12일, 개신교측도 잠실종합운동장 올림픽주경기장에 모여 구국 기도회를 개최했다. 40여개 교단과 30여개 단체가 공동주최한 이 연합 기도회는 한반도 평화를 향한 한국 개신교계의 염원을 재확인하는 자리였다. 대한예수교 장로회를 비롯한 주최 측은 교회가 한반도 평화를 위해 기도하고, 남북 교류의 새장을 열어가는 '내용의 실천 강령을 공표하고, 한국교회의 단합을 호소했다. 개신교계가 부자세습, 종교인 과세 논쟁으로 불

거진 시민들의 깊은 불신을 씻어내고, 오랜만에 제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8. 천도교, 인내천 사상 범 국민 의식개혁운동 개시

종교가 해를 더할수록 깊어만 가는 한국사회의 계층 갈등, 그리고 신음하는 약자들을 상대로 내놓을 수 있는 구원의 해법은 무엇일까. 민족종교인 천도교는 그 답을 인내천 사상을 기반으로 한 범 국민 의식개혁운동에서 찾고 있다. 이경희(72) 천도교 교령은 지난달 1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식개혁을 위한 대도종흥 비전집을 발표했다. 천도교측은 이러한 의식개혁 운동을 통해 계층과 세대, 진보와 보수간 갈등을 해소하고 공감의 기반을 넓혀 행복한 사회를 만든데 일조하겠다는 포부도 내세웠다.

9. 통합기치 내건 개신교 연합 기구, 3개에서 4개로 되려 증가

한국 개신교는 루터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3개 연합기구간 통합을 추진했다. 보수 성향의 한국교회총연합(한교연),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진보 성향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이 그 대상이다. 교단은 우선 보수성향의 단체들부터 통합하고 이어 진보적 성향의 단체를 끌어들이 통합을 따

무리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당초 3개였던 연합기구가 통합논의 과정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오히려 4개로 쪼개지며 개신교계가 마주한 통합의 이상이 얼마나 멀고 험한 과제임을 보여줬다. 개신교계 연합기구는 이로써 보수 성향의 한교연, 한기총,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등 4개 기구 체제로 확대됐다.

10. 천주교 등 종교계, 낙태죄 폐지 사회적 논의에 서명운동 돌입

논쟁의 발단은 참가자가 23만여명을 넘어선 낙태죄 폐지 청원이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달 26일 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선언을 하며 논란에 불을 댕겼다. 정부가 8년간 중단된 임신중절 실태를 내년중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종교계는 낙태죄 폐지 움직임에 반발하고 있다. 반대 운동의 총대를 맨 천주교는 지난 3일부터 전국 16개 교구에서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현행법(모자보건법 14조)은 강간이나 성폭행 등 특수한 경우에만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종교계는 낙태를 태아의 생명을 강제로 앗아가는 범죄행위로 보며 낙태죄 존치를 지지하고 있다.

뉴시스

부풀리고 조작된
가짜뉴스는
사라져야 합니다



가짜뉴스가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자극적이거나 의심스러운 뉴스는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한번 더 검증해보는 현명함으로
가짜뉴스를 근절시켜 정직하고 바른사회를 만들어 갑시다.